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재열



전국에 영어 열풍이 불고 있다. 이번 열풍은 10여년 전 한 소설가에 의해 제기됐던 영어 공용화 논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영어 교육 개혁의 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매년 영어 사교육비로 15조원을 쓰아놓고 가족이 생이별 해가며 영어를 배우러 외국으로 떠나는 관계 아니 영어 교육 개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10년 넘게 영어를 배워도 외국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현실에서 고교 과정을 마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새정부의 청사진에 귀가 솔깃해진다.

영어가 권력인 세상

영어는 대한민국에서 권력이자 이해율로 기다. 영어 구사능력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이른바 '영어 디바이드(English Divide)' 현상이 심한 나리중의 하나다.

그러나 인수위의 영어 교육 개혁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육여건이 열악한 전남지역에서는 술한 난관이 놓여 있다. 지역간 경제적 차이가 결국에는 학력 격차로까지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수업료를 내지 못한 고교생이 전

영어교육 개혁 서두르지 말라

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전남이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수업료 미납 학생은 전체의 15%로 서울에 비해 15배나 많았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큰 영어는 대도시 지역과 학력 격차가 가장 큰 과목이다.

대학 입시를 자율화로 맡기겠다는 구상도 전남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고교 등급제 본고사가 사실상 부활될 경우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여기에 30여년

간 입시제도의 근간이었던 고교 평준화 제도 역시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고교 평준화가 부작용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대를 갈 수 있고 의치 약계열을 지원할 수 있는 수능점수를 얻는 것을 경쟁력 제고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최고로 우수한 영재를 뽑는다는 과학과 출신들이 의대로 물리고 명문대 공대를 졸업한 인재들이 다시 의대로 진학하는 현실은 학생 선발권을 자율에 맡겨야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만들 수 있다는 주

제 아무리 공정하고 교육적인 경쟁 질서를 마련하더라도 사회적 여건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횟일이기 십상이다. 일류 대입학에 목숨 거는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입시제도 변화도 사교육의 놀라운 적응력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간 교육격차 보완을

교육에 있어서 평등과 경쟁의 논리는 보완적 관계다. 초·중등 교육은 상대적으로 평등 논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대학교육은 특성화와 다양화를 전제로 경쟁구도가 바람직하다.

교육 혁신은 물론 시급하다. 그러나 교육문제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들과 교육계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영어몰입교육 확대나 영어교사 3진 아웃제 등 설익은 정책을 불쑥 내놓았다가 황급히 거둬들이는 갑작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년대인 교육 문제에 있어 과목은 금물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지역간 교육여건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이 아쉽다. 지나치게 실적만 강조하는 실용 지상주의는 5년 후 또 다시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들 소지가 크다.

〈사회 2부장〉 aj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박행순



역의 유능한 연구자들이 연구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타자로 떠나고 있다. 그 빛나는 동남아 유학생들이 차지된다. 언론에서는 '광주·전남 과학기술 위기'라며 떠들썩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이공계 기업 현상과 함께 학위 소지자들이 해외 유학이나 타 도시 진학, 의·치대 전문대학원, 공무원 시험 준비 등으로 연구실에서 사라지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한 과학기술인들은 드물고 대부분은 청년 미취업자로 남는다. 이 같은 현실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이들의 좌절과 한숨은 깊어만 간다.

반면 과학기술계에 편입되기를 간절

및 훈련 등의 인력관리 등이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안전관리이며 관리대상은 생명과 자산뿐만 아니라 기관의 명예도 포함된다. 이처럼 다양한 부분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와 실원들 사이의 교양 역할도 담당해야 하는 랩 매니저는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로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 축적과 함께 화합과 중재 능력, 그리고 적절한 리더십도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 실험실(Lab)에도 경영마인드를 가진 훈련받은 랩 매니저라는 전문인이 있어야 한다. 미국과 호주에는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체, 회사, 병원, 검역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랩 매니저가 중간관리자로 활동한다. 랩 매니저의 가장 큰 장점은 정년이 없으며

랩(lab) 매니저, 새 유망직종 기대

히 원하지만 너무 오래 쉬어서 자신감을 상실한 다른 유류(遊休)인력이 있으니 이는 가시와 자녀 양육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이공계 경력 단절 여성들이다.

또 연구를 접으려는 유능한 인재들이 있는데 '유망여성'이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박사들이다. 40대 후반 들어 시력과 체력은 떨어지고 연구비는 끝길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 강국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상 중·대형 연구비를 장기간 지원받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보좌하는 '랩 매니저(Lab Manager)'라는 새로운 직종을 앞서 열거한 세 종류의 과학기술인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랩 매니저는 실험실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관련 모든 과정을 조직적으로 관장하는 중간관리자이다. 주요 업무는 연구비 관리, 논문 및 발표자료 준비, 실험실 안전관리, 기기관리, 신입자 교육

경력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므로 나이가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에 강력히 제안하는 것은 대형 연구비를 지급할 때에 '연구원 구성'에 랩 매니저를 의무화해 고용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정부사업비를 효과적으로 경영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배우는 인턴 기간을 설정해 봉급의 일부를 지원하는 인턴비 보조방안 등이다.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지원은 랩 매니저라는 신 직업의 조기 정착과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하여 랩 매니저가 이공계 출신 청년 실업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과학기술 재진입 통로로 활용되며, 유망여성들의 장기화에 축적된 전공지식과 리더십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새로운 활동무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랩 매니저는 남성과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매력적인 신 직업이기도 하다.

〈광주전남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장·2005년 10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삼겹살 외 다른 부위도 즐겨 드세요

삼겹살만 선호하는 식습관 때문에 꽤지 부위의 맛과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각종 요리 경연대회도 열어주기를 바란다. TV에서도 다른 부위로 할 수 있는 요리를 적극 알려줬으면 한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과 함께 다이어트에도 좋은 부위를 적극 알려 삼겹살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가치도 올려야 한다. 그러면 돼지고기 소비도 당연히 늘어나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김근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부위의 맛과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각종 요리 경연대회도 열어주기를 바란다. TV에서도 다른 부위로 할 수 있는 요리를 적극 알려줬으면 한다.

다른 아이들은 몇 과목씩 과외를 하지만 이 아이는 과외는 고사하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 학습 능력이 뛰쳐질 수 밖에 없다.

일반 가정의 아이들 중 기초적인 읽기, 쓰기

기능 못하는 기초학습부진 학생 비율은 1.4%에 불과하지만, 기초생활 수급대상 가정의 경우 무려 7%나 된다고 한다. 결손 가정의 경우 더 심각해 10.9%에 달한다. 이런 학습 부진은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가 늘 우려하는 가난의 대물림까지 낳는 것이다. 초등학교 때 기초를 다져놓지 못하면 중·고등 학교로 가면서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된다.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 어린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등 특화된 교육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

▲유지호: 목포시 축복동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 지원책 필요

시설

정치권, 설 민심 제대로 듣고 헤아려라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됐다. 이번 설 연휴는 달새나 꽈리들의 마음도 한결 여유로울 것이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은 부모와 친지, 이웃 어른들을 찾아뵙고 안부와 함께 일상의 어려움을 이어낼 것이다. 따뜻한 덮침으로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설이 되었으면 한다.

올 설 분위기는 예전만 못하다. 연초부터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들의 실집살이가 더욱 과파해진 것이다. 개선되지 않은 체감 실업률도 설 경기를 얼어붙게 했다.

설 연휴는 여론 형성의 광장이다. 서울과 지방의 민심이 만나고 부딪치면서 민심의 혼주소가 드러난다. 여전 정치권이 설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선 것은 바로 이 때이다. 특히 이달 말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4월 총선을 눈 앞에 두고 있어 정치권이 설 민심에 죽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과거 설이나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저마다 아전인수 식으로

민심을 해석해 정쟁을 일삼기 일쑤였다. 겸허하게 여론을 보고 듣기보다는 민심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한 측면이 있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번 설 연휴 동안 지역민심을 제대로 보고 들어야 한다. 무엇이 민생을 고달프게 하는가, 진정 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째뚫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의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전국 최고의 실업률, 고사 직전의 건설경기 등 지역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위 폐지, 서남해안 및 F1 특별법 실증,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차질 위기, 조선대로 스쿨 탈락 등 위기로 빠진 지역성장동력 사업에 지역 민심은 좌절이다.

새 정부와 애·야 정치권은 설 연휴 동안 살피 지역 민생과 민심을 토대로 광주·전남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물가안정대책 생활물가부터 잡아야

정부가 5일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유사의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는 등 물가안정대책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자차체별로 공공요금 안정순위를 평가,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학등록금과 학원비, 교복값 인상 등에 대한 가격답합 행위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최근의 물가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고유가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비롯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그만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3.9%를 기록했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동월과 비교해 5.1%나 뛰었다. 상승세를 감안하면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을 6%는 물론 5%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원유와 금, 꼬불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휘발유와 밀가루, 라면, 국수 등 국내 물가에 속속 반영되고 있다. 여기에 도시가스, 시내버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과 대학 등록금, 보육시설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까지 들썩이면서 물가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고물가는 소비 위축을 부를 수밖에 없다. 소비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투자를 위축시켜 생산 부진으로 물가에 속속 반영되고 있다. 여기에 도시가스, 시내버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과 대학 등록금, 보육시설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까지 들썩이면서 물가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유류 및 꼬불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물가에 속속 반영되고 있다. 시장의 높은 유동성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활물가로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중소기업 사장 김모씨는 최근 신입사원이 만들어온 기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법에 틀린 곳이 많은데다 기안의 의도도 명확하지 않아서다. 영어자료를 번역시키면 그런대로 해내지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작업은 영 아니다.

김씨의 고민을 뒷받침해주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 리크루팅업체가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입사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국어능력'이라는 응답이었다.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뛰고 들어간 대기업 신입사원들의 국어능력이 그 정도라니, 이해가 안 갈 법하다. 그러나 조만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 있다. 영어 위주의 교육

에 '인터넷 문화'의 영향이 아닐까.

초등학교 국어교육은 무엇보다 기초를 다지고 국어에 친근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본을 무시하고 대입논술을 위해 무작정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영어에 몰두하도록 한다. 그러나 국어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설상가상, 대통령령 인수위가 영어공

교육 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어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학교 교육만으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는 이가 많다. 전 국민이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국어능력의 후퇴 등 웬지 설의 정책이지 싶다.

때마침 국립국어원이 올해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해 관심이다. 외국어 교육이 강조되면서 외국어 학습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국어능력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국어능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일본도 지난 2000년 영어의 제2공용어 정책 발표를 했다. 그러나 무조건 영어를 실용화하고 하지 않고, 일본어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일본문화를 좀 더 발전시키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인수위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1(우편번호 501-711) |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구·구역구청·배달연락) | www.kwangju.co.kr

편집국내내	사 회 2 부	2200-619	경 영 지 원 국	2200-511